

# 산업전환고용안정위 신설... “해고·근로조건 향상 등 지원”

고용부, 근로자·사업주 의견 수렴  
산업전환법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직업능력개발훈련·재취업 등 실시

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해고 등 고용안정 문제에 체계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성장이 축소되고 탄소중립·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부상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작년 10월 국회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했다. 산업전환지원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수행하고 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안은 산업전환 지원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

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국가물관리위, ‘극한 가뭄’ 해법 찾는다

환경부 등 ‘가뭄 대응’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효율적인 가뭄 공동대응을 위한 선결과제’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가뭄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농림축

산식품부 등 부처·기관의 주제 발표와 이주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환경부 수도기획과는 ‘가뭄대응을 위한 물관리 기관(시설) 간 연계운영 사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는 ‘농업가뭄대책과 국가가뭄 대응의 협업 방안’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는 ‘가뭄의 관점에서 본 국가 이수안전도 의재평가’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2·2023년 광주·전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응 고찰’(지자체 입장에서 본 가뭄 대응)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는 ‘효율적 가뭄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도·기술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K-미식 벨트 관광상품 개발 민간 공모 추진

농식품부, 내달 20일까지 모집  
개발·홍보, 해설사 육성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11일 ‘K-미식벨트 관광상품 개발·홍보’ 사업의 민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고품격 음식 관광상품의 발굴 및 개발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여행사 등이 대상이다.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은 K-푸드 생태계 확장을 통한 국내 경기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특색있는 미식 관광상품의 개발·홍보, 해설사 육성, 시설 개

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며, 전통주·식품명인·향토음식 등 유무형 미식 자원 결합을 통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는 민간 기획사(여행사)는 한식 대표 발표문화인 ‘장’을 주제로 한 미식 장소 및 콘텐츠의 발굴, 관광상품 경영자 역량 제고, 지역 명소 관광 연계화 및 홍보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미식 자원 데이터베이스 15만여 개’ 및 ‘미식 관광코스 콘셉트 90개’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ADB, 올해 韓 경제 2.2% 성장 전망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  
물가 올해 2.5% 내년 2.0% 안정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 수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봤으나 2%대 중반을 넘어서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월평균 3%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2%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2%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작년 12월)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제시했다. 2024·2025 모두 2%로 작년(1.4%)보다는 경기 위축이 완화할 것으로 본 것이다.

ADB는 올해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특히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수출이 증가해 GDP 성장 폭이 2.3%로 소폭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잉 관세 면제·인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전경. /메트로

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에 1월(2.8%), 2월(3.1%), 3월(3.1%)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3%대를 기록 중이다. ADB의 2024년 물가 전망치(2.5%)에 따르면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물가가 2%대에 머물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영향이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했다. 특히 한

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의 경우,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비교적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현재로서는 덜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에 비해 0.1%포인트(p) 상향 조정된 것이다. 아시아지역은 내년에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단, 하방 리스크 요인도 제시했다. 중동 지정학적 분쟁 악화를 비롯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이다.

이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및 통화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올해 3.2%, 내년 3.0% 등 서서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 고금리에 국가부채 2400조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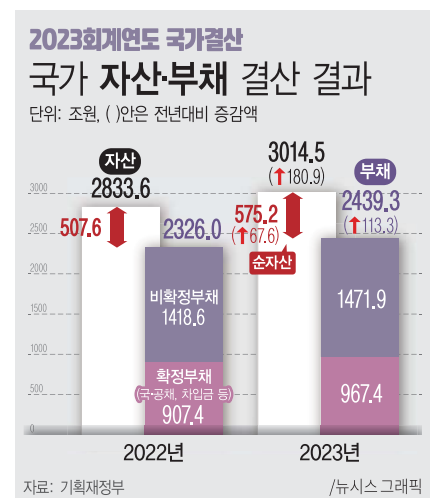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결  
작년 기준 GDP 2236조 초과 수준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400조를 넘어섰으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 국채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국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총지출이 줄었으나 총수입도 감소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6조 원대를 기록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439조3000억 원으로 전년(2326조 원) 대비 113조 3000억 원(4.9%) 늘어났다. 작년 기준 명목 GDP인 2236조3000억 원을 초과한 수준이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작년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60조 원 늘어난 96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



전하기 위한 국제 발행이 증가했지만 외화 외국환형평기금채권(외평채) 잔액이 늘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채를 가리킨다.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53조3000억 원 증가한 1471조9000억 원이었다. 그중 연금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9000억 원 늘었다. 공무원 연금이 45조3000억 원, 군인연금이 3조 6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